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9. 16.(화) 배포 시 배포 2025. 9. 16.(화) 국무회의 종료 후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 혁신을 시작한다!

- 농업·농촌 분야 4개 국정과제(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신속 추진
- 농정 전반에 국가 책임 강화, 개혁·혁신,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관 4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 ①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②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③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④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이번 농림축산식품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68번.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첫째,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개혁 및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후위기·생산성 정체 등 농업 생산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 법제화**와 더불어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등 체계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로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하여 **스마트농업을 고도화(농업 AX)**하고, 중소농·노지 등 전체 농가 대상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K-푸드 수출은 ’30년까지 150억불**을 목표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중심 수출전략으로 집중 추진**한다.

한편,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을 도모하고, 기존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하여** 도매시장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전면 혁신(9.15.,「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발표)한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경축순환·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농축산업이 환경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정과제 69번.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둘째,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재해·인구감소 등 개별 농가 단위 대응이 불가능한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기후변화적응,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을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농업인이 재해 피해를 입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재해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필수농자재(비료·사료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지를 집적화하여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을 **'30년까지 100개소 육성**한다. 한편, 정예화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및 청년농 우선 임대로 자금·농지·교육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정적인 세대전환을 위해서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국정과제 70번.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셋째, 주거·일자리·생활서비스·기본소득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농촌**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하고,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기반을 구축한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 **농어촌 빈집 7.8만호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 등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한다. 선도기업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확대**하고, 농업유산·전통문화 등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확산**, **찾아가는 서비스 100개 읍면**으로 **확대** 등 농촌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서비스를 확충한다.

국정과제 80번.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넷째, 동물 '복지' 중심의 정책 기반·제도 정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가칭)동물복지기본법」 제정**('27),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등과 함께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한다.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시장규모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지원을 위해 **「(가칭)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26) 등 제도·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와 함께, **대국민 정책 의견수렴 채널인 '모두의 농정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정책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농정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하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 라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분야 국정과제 인포그래픽
2. 농림축산식품분야 4대 국정과제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지현 (044-201-1341)
		담당자	사무관	한기연 (044-201-1387)
담당 부서 <국정과제 68번>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1810)
		담당자	서기관	정정희 (044-201-1815)
담당 부서 <국정과제 69번>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1711)
		담당자	사무관	정성수 (044-201-1715)
담당 부서 <국정과제 70번>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수 (044-201-1511)
		담당자	사무관	장래현 (044-201-1516)
담당 부서 <국정과제 80번>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담당자	서기관	차희수 (044-201-26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과제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01 식량안보 강화

-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확보, 농지면적 보전 법제화 등
- 쌀 수급 안정 — 강력한 타작물 인센티브로 쌀 생산 과잉 방지 ▼ 불가피한 과잉 시 정부 매입
- 과학적 근거기반 선제적 수급 안정 — 농림위성 활용 수급예측 고도화 ⊕ 자조금 수급관리 기능 강화

02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 바우처: 임산부·영유아·아동이 있는 생계 급여가구 ⊕ 청년이 있는 가구
- 아침밥(확대): 대학생 ⊕ 산단 근로자
- 점심밥(신규):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과일간식(초등학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임산부) 지원재개

03 스마트농업 고도화

- 중소농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 농산업 AI & 로봇 등 R&D 투자 확대

04 K-푸드 수출 확산(150억불 목표)

- K-컬쳐 연계 마케팅 확대
- K-푸드 거점 재외 공관 지정 확대
- 한식 전통주 등 수출 브랜드 육성

05 유통구조 혁신

- 도매유통: 오프라인 → 온라인
  - 50% 이상 온라인 도매로 전환
- 기존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 다변화
- 도매시장 공공성·투명성 제고
  - 출하자 지원기금 조성
  - 위탁수수료 개편
  - 매수가격 공개
- 생산자·소비자 시장관리운영위 참여 확대
-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300개소)

06 친환경농업 확산

- 생산과정 위험요소 평가 방식 인증제 도입
- 경축순환 농업 체계 확립
- 탄소중립 직불제 신규도입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기대효과

식량자급률 제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상생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01 소득안전망 강화

공익직불 확대

기존			
기본형 공익직불	전략작물 직불	친환경 직불	→ 단가인상

신규		
기후변화 적응 직불	동물복지 축산 직불	→ 신규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수급관리 노력에도 일정 수준 이상 가격 하락에 대비

02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보험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차등화

재해보험 할증 경감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시 제외

비보험작물 지원제도 마련
- 보험 방식으로 개별 농가 피해를 측정·보상

재해 대응체계 강화

재해위험지도 구축(AI 활용) ⊕ 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전국 확대

03 경영비 부담 완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정도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 확대 **200개소**

공동영농법인 육성 **100개소**

04 농업 세대 전환

청년농업인재 양성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청년 우선임대, 임대 상한 조정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노후소득 보장

기대효과

70세 미만 농가소득
→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근로소득 수준으로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01 농촌 재생 지원
농촌공간 기능별 (정주·산업·경관) 재배치
농촌
공간계획 확산
농촌특화지구
육성 시군별 1개소
농어촌 빈집 (7.8만호)
창업·관광 공간으로 재생
생활인프라 조성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확대 (18개소)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재생 거점마을 조성 (시군별 1개소)
02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RE100 실현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햇빛소득마을 조성 (500개소)
영농형 태양광 확대
계획입지 기반 농지·농업법인 규제완화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활성화
03 혁신 일자리 창출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기회발전특구 연계
K-헤리티지 관광벨트 구축
국가정원 확충
04 필수서비스 공급
농촌 중심지
생활 SOC 확충
취약지역
찾아가는 서비스 * 확대 (100개 읍면) *의료, 돌봄, 식품 등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확산
왕진버스 서비스 개편 (보건소 연계)
05 기본소득 도입
햇빛·바람 연금 연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단계적 확산
기대효과
농촌 생활인구 증가, 재생에너지 생산
→ 농산촌 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01 동물복지 정책기반 강화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27)
-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 정책 범위 확장 : 반려동물 중심 ››› 다양한 동물

* 농장동물, 동물원·실험·봉사·레저 동물 복지 개선

- 동물복지 축산 직불금 도입
-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면 적용
-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부처합동)
-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 학대 말 긴급 구호시스템 구축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

02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 공공형 동물병원 조성
- 상생동물병원 민간 확산
-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확산
  * 상생동물병원 연계
-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확대
- 동물의료보험 활성화
  * 동물등록 지원 및 동물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03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27)
-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 공장식 생산·판매체계 개편

시설인력기준 단계적 향상 + 광고표시기준 강화 + 위반시 처분근거 마련

04 연관산업 육성

01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26)
* 펫푸드 등 수출·창업 지원

02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03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 마련

기대효과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 원칙 확립,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동물의료 진료비 경감

붙임2 **이재명정부 농림축산식품 분야 4대 국정과제**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수급 안정으로 **쌀·식량작물 적정가격** 유지

○ 스마트농업, K-푸드 수출,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농축산물 유통개혁** 추진

□ 주요내용

○ (**식량안보 강화**)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관련 예산 확보 및 농지 면적 보전을 위한 법적 제도화 추진

- 강력한 타 작물 인센티브로 쌀 생산과잉 사전 방지, 불가피한 과잉시 정부 매입
-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자조금의 수급관리기능 제고

○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 초등학생 과일간식 및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재개

○ (**스마트농업 고도화**)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및 농산업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R&D 투자 확대

○ (**K-푸드 수출 확산**) K-푸드 거점 재외공관 지정 확대, ODA·문화 마케팅 연계, 한식·전통주 등 수출 주력 품목 육성으로 **수출액 150억불** 달성

○ (**유통구조 혁신**)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하여** 도매시장 등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 다양화

- 출하자 지원기금 조성, 위탁수수료 체계 개편, 매수가격 공개 등 도매시장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소비자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 생산·유통 일관출하 체계를 위해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300개소) 등 추진

○ (**친환경농업 확산**) **경축순환**(가축분뇨 퇴비화)·**탄소중립직불제** 신규 도입, 생산과정 위험요소 평가 방식으로 인증제 전환 및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 기대효과

○ 식량자급률 제고 및 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 도모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 과제목표

○ 농가 소득 **기본안전망 보강**, 농산물 생산·가격 변동에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 **농업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 농가 **경영비 부담 최소화**, 농업 **세대전환** 촉진

□ 주요내용

○ (**소득안전망 강화**) 다양한 선택직불 도입 등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 도입

- **기본형 공익직불·전략작물직불·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기후변화적응 및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제** 도입
- 농산물 수급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상 가격 하락 시에 대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 시 제외**

- **재해 복구 지원**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차등화
- **비보험작물**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개별농가 피해를 측정·보상하는 지원제도 마련
- AI 등 활용한 재해위험지도 구축, 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 (**경영비 부담 완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정도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 확대(200개소) 등 농업경영 지원 강화

- 농지 임차 등으로 농지 집적화·경영 규모화를 추진하는 **공동영농법인 육성**(100개소)

○ (**농업 세대전환**)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으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고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

- **공공비축농지를 2배 확대**하고 **청년농에 우선 임대** 및 임대 상한 조정

□ 기대효과

○ **70세 미만 농가소득**을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 근로소득 수준**으로 제고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 과제목표

○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 농어촌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 주요내용

○ (**농촌 재생 지원**)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으로 농촌공간을 **기능별**(정주·산업·경관 등)**로 재배치**하고 빈집 재생 및 인프라 확대

- **농어촌 빈집 7.8만호**를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 및 재생
- **재생거점마을**(시군별 1개소) 조성,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18개소) 확대 등 생활인프라 조성 및 귀농·귀촌 지원 예산 복원

○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 계획입지 기반의 농지·농업법인 규제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농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전기 등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활성화

○ (**혁신 일자리 창출**)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하여 **기회발전특구**와 연계, **K-헤리티지 관광벨트** 구축, **국가정원** 확충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 (**필수서비스 공급**) **농촌 중심지**는 생활 SOC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은 의료, 돌봄, 식품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100개 읍면)

- 주민 수요를 실시간 반영하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콜버스 등)하고, 왕진버스 서비스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개편

○ (**기본소득 도입**)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바람 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산

□ 기대효과

○ 생활인구 증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 과제목표

○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 관점을 전환,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지역의 동물진료 공백 최소화

□ 주요내용

○ (**동물복지 정책기반 강화**) (가칭)**「동물복지기본법」** 제정('27) 및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추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 확충

- **농장동물, 동물원·실험·봉사·레저 동물** 등 복지 개선 및 관리체계 마련

* ▲동물복지 축산직불금 도입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면 적용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관계부처 합동)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학대 말 긴급 구호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민간 확산(상생동물병원) 추진

-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확대**하고,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 등록 지원 및 동물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를 도입('27)하고,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및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등 영업관리 강화

- 시설·인력 기준의 단계적 향상, 광고 표시기준 강화 및 위반시 처분 근거 마련 등 **공장식 생산·판매체계** 개편 기반 조성

○ (**연관산업 육성**) **펫푸드** 등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가칭)**「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26)

- 영양표준 등 펫푸드 분류체계,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 등 마련

□ 기대효과

○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 원칙을 확립하고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 동물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비 부담 경감**